

경쟁력 저하요인 분석의 허상

최근 국내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요인 분석이 한창이다.

그러나 경쟁력 요인 분석에 있어 분석기관마다의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자기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인위적인 가중치 설정 및 분석대상의 왜곡도 엿보이고 있어 건전한 산업발전보다는 자기방어에 충실한 나머지 혹시 산업현상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25개 국내기업과 이들이 운영하는 51개 해외공장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요소비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은 해외에서보다 금리는 1.5배, 임금은 2.2배, 공단분양가는 5.5배, 물류비는 2.0배 비싸게 지불하고 있으며, 선진국 진출공장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임금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저하, 산업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전경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공장의 평균 차입금리는 7.55%로 나타나 국내 11.45%에 비해 2/3 수준에 불과하고, 시간당 임금은 국내가 9.47달러, 해외가 4.31달러, 평방미터당 공단분양가는 국내 149달러, 해외 27달러, 매출액 중 물류비는 국내 8.75%, 해외 4.36%로 국내의 생산요소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를 보면, 해외공장 중 중국이 8.50%로 가장 높고 동남아 7.37%, 기타 6.64%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당 임금도 국내는 9.47달러로 선진국의 15.37달러에 비해서는 낮지만 중국의 0.61달러, 동남아의 0.84달러에 비해서는 10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분양가는 국내가 평방미터당 149달러로 중국에 비해서는 4.2배, 동남아의 6.7배에 달하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10.4배나 높다. 물류비도 중국이 매출액 대비 4.70%, 선진국이 4.31%, 동남아가 3.30%인데 비해 국내는 8.75%로 2배에 달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서류가 44.2개나 돼 중국 9.6개, 선진국 6.5개에 비해 턱없이 많았으며, 동남아의 25.6개에 비해서도 1.7배 많았다. 물론 인허가서류라는 항목은 형식적인 면을 지적한 것이고, 사실적으로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무사안일, 무능력 등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경련은 한마디로 국내에 공장을 건설,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국,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어느것 하나도 유리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경쟁력을 비교분석할 때 금리, 임금, 부지비, 물류비를 대상요인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4가지 요인이 원재료비를 제외한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품 경쟁력을 분석할 때에는 이 4가지 요인 뿐만 아니라 R&D 투자를 비롯 전문화, 경영능력, 국민의식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몰가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특히, WTO체제가 정착되고 국제경쟁이 일반화되고 있는 최근의 산업현실에서는 R&D를 비롯한 경영자의 자질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기업들과 같이 문어발식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즉, 문어발식 사업확장은 전문화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품질경쟁을 어렵게 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본축적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임으로써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차입이자 부담으로 인해 상품의 생산비용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낮추는 우를 범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걸친 대기업 및 관련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지가 상승 및 이로인한 공장 부지가 상승,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생계비 폭등 및 생활의욕 상실 등과 같은 경영계의 자가당착도 경쟁력 약화의 주범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경련의 4가지 경쟁력 요인은 경영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제외한 채 정부 및 근로자들에게 경쟁력 약화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영계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하고, 또 문제 제기에 앞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해둔다.

<화학저널 1996/11/25>